

우리표준체계 수출

수출전략지역에 우리 표준체계를 보급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프라 협력사업」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일부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연수프로그램에만 국한하여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기술료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02년부터 아세안 등 18개국 111명 교육수료하였다.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 지역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들 국가의 표준체계가 미흡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국내 모 전자회사는 일부 남미국가에 인증 제도가 없어 아시아산 저가 불량제품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어, 인증체계 구축지원을 요청해왔다.

또 다른 모 에너지관련 기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측정표준 등 표준체계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체계화된 표준과 적합성평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해당 국가의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체계 정립, 시험평가 능력 향상, 무역상기술장벽(TBT)에 대한 운영 노하

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0여개국 중점 신흥시장국가의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장·단기로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적극적으로 전수한다는 전략이다.

동 사업의 첫 단계로, 기술표준원은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CIS 지역 8개국 16명의 표준 및 품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국 8개국 16명 (각국 2명)은 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 남미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CIS (아제르바이잔)이다.

이러한 표준체계 보급전략을 통해 우리기업 입장에선 기술규제의 사전 대응, 중복 시험인증 방지, 우수 기술력 인정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련 시험·연구장비 등의 제품과 전문인력을 패키지로 수출하여, 새로운 기술 서비스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표준원은 윤종구 국제표준협력과장은 “적극적인 표준교육과 교류협력을 통해 표준체계를 전수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를 이해시키는 문화적 외교활동으로도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